

< 7. 1 의약분업실현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

부당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4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재결의는 오는 7. 1 의약분업실현을 바라는 제 시민사회회의의 요구와 국민건강권 실현에 반하는 것으로써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의약분업안은 작년 5월 10일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오랜 논의를 통해 상호의견조율과 합의에 의해 마련한 것으로 번복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지속적인 대규모 집회나 집단 휴진을 전개하며 사실상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주장하듯이 진정 '올바른 의약분업'을 원한다면, '의약분업 지역 협력회의'의 원활한 구성과 국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위한 논의의 장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의사협회는 의사의 진료권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 전문의약품 분류의 재조정 등을 요구조건으로 제시하며 의약분업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은 합의안 조정과정과 이후 준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보완된 것으로 더 이상 의약분업반대나 집단휴진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보수가를 6%인상시켜 의료계의 소득보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으며, 임의조제시 약사의 면허정지조치를 취하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분류도 대부분의 의약품이 의약분업 합의안 작성시 분류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1년 단위 평가를 거쳐 충분히 재조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의약분업 합의안을 번복하고 국민의 건강을 불모로 한 의료계의 집단 휴진은 명분이 없습니다.

7. 1 의약분업실현을 바라는 제 시민사회단체는 다소의 국민적 불편이 있다하더라도 의약분업의 안정적인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과 희생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의약분업의 필요성과 이용방안을 자세히 알려나갈 것입니다. 둘째, 올바른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기반정착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셋째, 7. 1 의약분업 시행이후 임의조제근절 등의 감시활동을 통해 약물오남용방지, 국민건강증진, 의료개혁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부당하고 명분없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의해 주십시오.

1.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집단휴진에 대해 항의하고 고발하십시오.

	단체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고발센터	건강연대	3211-4356	www.konkang.or.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772-9898	www.ccej.or.kr
	녹색소비자연대	763-4972	
	서울 YMCA	733-3181	consumer.ymca.or.kr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739-5441	www.cacpk.org
	의료개혁시민연합	747-5156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777-1750	
	참여연대	723-5056	www.peoplepower21.org

2. 국민의 이익을 담보로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의사단체에 적극 항의하십시오.

※ 대한의사협회 (T : 794-2474, www.kma.org)

3. 응급환자의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1339응급환자정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번호(02, 051, 053, 032, 062, 042, 0331, 0361, 0391, 0431, 0652, 064)+ 1339

2000. 4. 4

7월 1일 의약분업실현과 의료계의 부당 집단진료거부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건강연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녹색소비자연대 / 서울 YMCA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의료개혁시민연합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 전국 농민회 총연맹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 전국 빈민연합 /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상 가나다 순)